

‘쌍특검법’ 오늘 재표결... 與 “당론 부결” 野 “재발의”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힘 “정부·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 의원 8명 이탈맨 가결... 단속 총력 민주 “내란 진압 위해 특검 출범해야” 농업4법 등 ‘거부권’ 8개 법안 재표결

여야는 ‘쌍특검법’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가결과 부결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부결당론을 유지하며 이탈표 방지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고 윤석열과 단절하라”며 찬성 표결을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8일 쌍특검법 재표결시 당론으로 부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미 지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 당

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 그전 특검법처럼 김 여사 주가 조작 관련 항목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법안을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라며 “정부와 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도 나중에 그런 점을 알고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다”며 “내일도 당론을 유지하면서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원내지도부는 쌍특검법의 위헌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

을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의총에서 쌍특검법의 문제점과 부결 이후 대처 방안 등을 의원들에게 명확히 제시하면 이탈표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진행된 본회의 표결 당시에는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각각 5명, 4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면서 부결되면 곧바로 재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수사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 정당이나, 위헌 정당이나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

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 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 강도짓은 잘못이나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번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에도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의원들이 계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양심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가결 되려면 총 200표가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른바 ‘탄핵 찬성파’ 여당 의원 12명의 선택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표결까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결집과 이탈표 방지에, 민주당은 양심 있는 여당 의원들에 대한 호소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8일 열어 ‘쌍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국회중언감정법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9일 내란사태와 경제위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태를 다루는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국회 측 대리인단 “소추사유 변경된 적 없다”

대한변협과 기자간담회서 밝혀 “내란, 헌법위반으로 판단받을 것” 국힘 “졸속 탄핵 각하해야” 주장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철회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헌법 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죄 대신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행위’를 헌법위반으로 판단받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사유는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포고령 발표 등이 사실상 내란행위에 해당하고, 이것이 탄핵 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 선관위 침입행위,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국회 집회 방해 및 침입행위, 포고령 선포행위 등을 주요한 소추 사유로 판단했다”며 “모두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라며 “범죄의 성립 여부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혼란과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내란죄 처벌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들은 모두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이고 탄핵심판의 결과는 내란죄 인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 사유와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당연히 별도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전술을 그대로 수용해 주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내란’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 38번이나 나올 정도로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며 “이것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 3심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엄청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안규백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김성원 국민의힘 간사,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끝마치고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비상계엄 국조특위, 14일 국방부 등 기관보고·22일 청문회

전 육군참모총장·방첩사령관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현장 조사, 청문회 등을 각각 2~3회씩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한 건’ 등 안건을 의결했다.

14일 예정된 첫 기관보고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 본부·방첩사령부·정보

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국방부조사본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5일 2차 기관보고에서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기관 증인으로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광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등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국정조사 청문회는 22일, 2월4일, 2월6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되고, 현장 조사의 경우 21일, 2월5일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기관증인 명단에는 이들을 포함해 177명이 포함된 바 있다.

여야는 기관증인 명단을 비롯해 청문회 일반증인, 현장 조사 대상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제주항공 참사 특위’ 15명 구성

국민의힘은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들을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마련 국회특위’를 구성

하기로 했다”며 “특위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고, 권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며 “향후 특위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유가족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혐의 고발

“尹 경호처 불법·상설특검 방지” 국힘 “국정 흔들지 말라”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국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

다.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

은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추면, 최 대행은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는 공포 정치는 이미 시작된 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탄핵병이 다시 시작되는 건가”라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라와 국정은 흔들지 말라.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